
정책참고자료

2019-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자치인재원, 지자체 맞춤형 교육으로 '평화의 힘' 키운다	4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 정책기획위·통일부·통일교육원 협업 기획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7
-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 선정, 1202개 개선방안 수립 -	

3 중소벤처기업부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13
- 범정부 특별단속('19.8.1~10.31)으로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규모 위법행위 적발...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	

4 교육부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17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0년~2022년)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장비 등 기술 자립화를 위한 ICT기기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22
- 「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	

6 문화체육관광부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26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업인들과 농업환경보전 위해 팔 걷어 붙인다.	39
-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	

8 환경부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_____ 44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

9 고용노동부

“꿈이 시작되는 공간!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_____ 52
- 강원권 최초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 전문기관 원주에 문열어...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결정과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 _____ 55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지자체·기관 공모 진행 -

11 국토교통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_____ 58
- 혁신도시 성장 발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역할 수행 -

1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_____ 61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논의 -

자치인재원, 지자체 맞춤형 교육으로 '평화의 힘' 키운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 정책기획위·통일부·통일교육원 협업 기획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특강, 통일 정책 설명, 북한이탈주민 특강, 통일·안보 현장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서의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정책기획위,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협업해 기획했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정책기획위원회 김용현 위원(동국대 교수)의 '평화번영의 판문점 선언' 특강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동북아 정치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한반도 정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원과 함께 '국제정세와 평화 통일 환경'을 주제로

격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 한반도 미래의 건설 비전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정립을 돕는다.

- 현장견학으로는 임진각과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사람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경기도 파주시 일원 통일·안보현장 등이 예정돼 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경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평화통일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해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필요성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대한민국의 현실 이해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공유
-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정과제협의회 등과 협업*, 맞춤형 교육으로 지자체 실행력 제고

* 정책기획위원회,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

□ 교육과정 개요

- 교육대상 : 중앙 및 지방 4급 이하 공무원
- 기간/ 인원 : 3일(11.20.~11.22) / 30여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 주요 내용

- ◇ **위원회 특강 : 정책기획위(김용현 위원)**
 -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판문점 선언'과 전망
- ◇ **부처별 정책 설명**
 - (통일교육원) 국제 정세와 평화통일 환경 등
- ◇ **전문가 특강 : 북한이탈주민 특강 및 교육생과의 대화**
 - 최근 북한 동향과 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 ◇ **현장학습 : 경기도 파주시 일원(임진각,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등**

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 선정, 1202개 개선방안 수립 -

- 119 구조·구급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하천·등산로 등 공공시설 422곳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을 주제로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과 1,202개의 개선방안을 소방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공유한다.

- 국민권익위는 교통·수난·추락 등 생활안전사고 개선대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5월까지 최근 3년간의 소방청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분석과 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422곳을 선정했다.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3,071건) : 579건('16년), 1,101건('17년), 1,391건('18년)
선정된 422곳은 주로 도로, 하천, 산악 등산로, 교량, 공원유원지 등이다. 이중 도로가 166곳, 하천이 104곳, 산악 등산로가 64곳으로 전체의 79%(334곳)를 차지했다.

[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유형]

계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시장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4	24
	39.3%	24.6%	15.1%	7.1%	2.6%	2.3%	2.1%	0.9%	5.7%

* (도로)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유원지)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경사로)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유해동물 출현지 등

지역별로는 8개 광역도 224곳(53.0%), 수도권 121곳(28.6%), 광역시 77곳(18.4%) 순으로 많았다.

[권역·지역별 개선대상 빈발지점 선정내역]

구분	수도권(121)			광역시(77)						광역도(224)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1	23	27	19	23	10	12	10	3	35	23	23	24	24	46	35	14	422
시	71	21	13	17	17	10	12	6	3	13	7	13	16	16	22	16	14	287
군	-	2	14	2	6	-	-	4	-	22	16	10	8	8	24	19	-	135

이 시설들에서 최근 3년간 8,070건의 119구조·구급 출동이 있었고 3,983명(사망 331명, 부상 3,65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선정된 422곳의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1,202개(시설별 평균 2.85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가 많은 도로시설에는 가드레일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선형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천에는 우천 시 출입 통제 장치와 수면부표를 설치하고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422개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단위: 개)]

개선 내용	계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개선방안	1,202	320	336	222	324

○ 보호·예방시설 설치(320개)

- (도로)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도로선형, 경사도 조정, 신호체계 개선
- (하천 등) 우천 출입통제 장치, 배수유도 시설, 수면 부표 설치
- (산악)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설치 등

○ 경고시설 설치(336개)

- (도로) 곡선구간, 과속위험지역,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 (하천 등) 자동 경고표출장비(지능형CCTV), 수위상승 경고장치 설치
- (산악) 탐방로 및 사고 발생지역 표시 강화 등

○ 시설유지·관리(222개)

- (도로) 조도 개선, 중앙분리대 수목 정돈 등 보행자 식별가능성 제고
- (하천 등) 배수시설 개선, 수심 조정, 구명장비 비치
- (산악) 계단 등의 퇴적물 및 낙석 정기적 사전제거 등

○ 운영 개선 등(324개)

- (도로) 속도제한, 구간단속, 주·정차 금지, 통행차량 제한
- (하천 등) 물놀이 관리지역 확대, 안전관리요원 편성·운용 확대
- (산악) 입산시간 지정, 기상특보 발효 시 탐방로 통제
- (기타) 노점상 정리, 주민홍보, 유관기관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국민권익위는 22일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5년 기획조사를 통해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64개 지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된 지점에서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및 소극행정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사고가 났어도 사고발생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관리 책임기관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공공시설 개선 보고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 적 : 개선방안 확정, 관계기관 대책추진 독려,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 일 시 : 2019. 11. 22.(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서울특별시 소공로 소재) 대회의실
- 대 상 : 소방청·경찰청·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책임기관 공직자 200명

□ 행사 식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 복지노동민원과장
14:02~14:07	5'	▪ 인사말씀	▪ 위원장
14:07~14:15	8'	▪ 기획조사 추진경과 및 개요 보고	▪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14:15~15:25	70'	▪ 안전체계적 접근과 생활안전 -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 개별 우수 사례 발표	▪ 한국교통연구원 ▪ 지자체 등 관리책임기관
15:25~15:45	20'	▪ 교통안전법의 개선권고 기능 활용 사례와 문제점 ▪ 119빅데이터 활용 국민안전 제고 방안	▪ 경찰청 ▪ 소방청
15:45~16:00	15'	▪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일정·방법) 안내 ▪ 질의 응답	▪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16:00		▪ 폐회 선언	▪ 복지노동민원과장

붙임2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방안 사례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최근 3년, 119 출동횟수 120회)



도로경사 조정, 배수시설개선 등으로 급커브길 교통 사고예방

서울 통일로 불광역~연신내역
(최근 3년, 119 출동횟수 27회)



신호기 및 정지선 이설, 버스전용 신호등 추가, 정차금지대 확대 등으로 교통 사고예방

전북 진안군 부귀면 계곡
(최근 3년, 119 출동횟수 2회, 사망 2명)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돌로 채우고, 하류지점을 준설하여 수심을 1.3m로 조정, 수난 사고 예방

경북 안동시 벽화마을
(최근 3년, 119 출동횟수 3회, 고령자 다수 거주)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 마을 곳곳에 핸드레일, 데크계단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낙상사고 예방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 범정부 특별단속('19.8.1~10.31)으로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규모 위법행위 적발...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 단속실적(금액 기준) : '18년(95억원), '19.1~7월(24억원), '19.8~10월(150억원)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같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단속중* : 75% 내외→ 단속 종료후** : 90% 수준) 늘어났다.

※ (설문조사 대상) ①서울장위, ②서울창신, ③서울독산, ④대구대봉, ⑤대구평리,

⑥ 부산범일 등 6개 의류관련 소공인 특화센터

설문조사 기간	긍정적 응답 비율
* 단속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단속 예방효과 : 72.9%, ○ 특별단속에 따른 의류업계 긍정영향 : 77.7% ○ 관계 부처 합동단속 평가 : 79%
** 단속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단속 효과(업체경영 및 의류산업 보호) : 91.4% ○ 지속적인 특별단속시 라벨같이 감소 영향 : 90.6% ○ 정부의 특별단속 노력 평가 : 90.3% ○ 향후 특별단속 실시 필요 : 91.0%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중기부장관 3점, 산업부장관 3점, 관세청장 3점, 서울특별시장 8점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같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 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같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같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 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관계자 대상 영상 상영(800회 이상)
- ② 소상공인방송TV를 통한 라벨갈이 근절 홍보영상 송출(일평균 2회 송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0년~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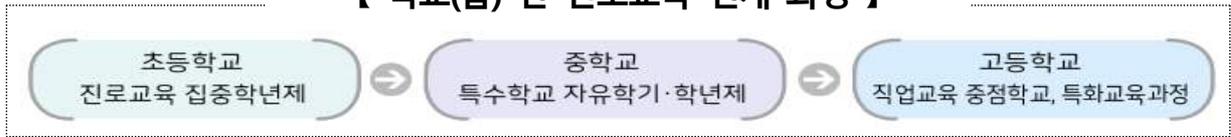
- ◆ 초·중·고 '진로인식-탐색-설계'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도
- ◆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 졸업 후 현장실습-취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 ◆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비율 2018년 56.3%에서 2022년 80% 목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와 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11월 21일(목) 발표했다.
 - 이번 방안에는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기반한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 이후 학부모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 간 단계별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개발

- 초·중·고 학교(급) 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과정 】



- 또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로 인한 체험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한다.
 -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평가, 사업체 견학 및 현장훈련, 선배직장인 멘토링, 사회적응훈련 등이 포함된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 배치

- 학생의 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진로진학 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한다.
 -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3 교육·복지·고용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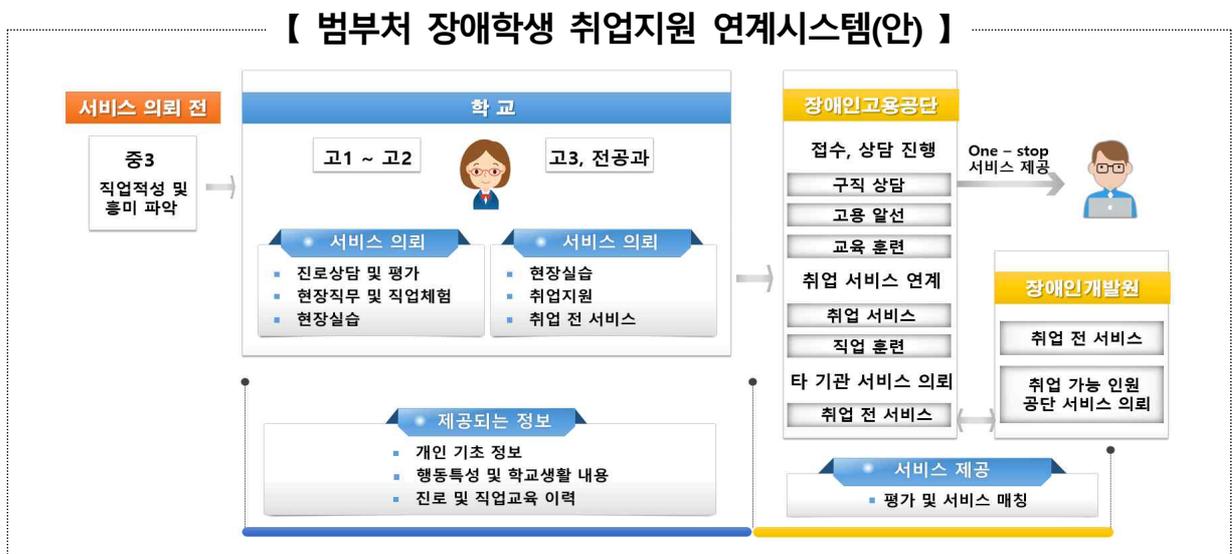
○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 복지, 고용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통합 지원한다.

* 교육·복지·고용 3개 부처 차관급 협약체결(2018년 4월 25일)을 통해 장애 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중앙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중

-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과 고용부·복지부의 고용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아준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업무 시스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시스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 장애학생이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4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인턴십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와 훈련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확대 규모 】



5 학부모의 진로 · 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및 지원역량 강화

-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과 ‘진로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한다.

* <http://www.nise.go.kr/onmam>

** 장애학생 진로 · 취업 · 진학 관련 소식을 분기별 소식지 형태로 제공

- 유은혜 부총리는 11월 21일(목) 인천 미추홀학교(교장 민병란)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참관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위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붙임]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

□ 행사 개요

- 행사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 간담회
- 일시/장소 : 2019. 11. 21.(목) 14:00~15:30 / 미추홀학교*(인천 남동구)
 - *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고등학교 및 전공과 25학급 181명 재학) / 교장 민병란
- 참석대상 : 부총리, 인천교육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국립특수교육원,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특수학교 교육활동 참관 및 참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및 교원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 행사장 도착 및 사전 환담	부총리, 교육감, 학부모 대표 등
14:10 ~ 14:30	20'	■ 진로·직업교육 교육활동 운영현황 참관 및 참여	교육활동 참관 및 참여
14:30 ~ 14:35	5'	■ 간담회 개회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등	4층 다목적실 부총리, 교육감, 학교장
14:35 ~ 14:45	10'	■ 교육활동 운영 현황 발표	미추홀학교
14:45 ~ 15:00	15'	■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발표	교육부
15:00 ~ 15:30	30'	■ 관계기관 지원 내용 안내 및 현장 안착 방안 등 논의 ■ 학부모 및 담당교직원 현장소통 등	관계부처(기관), 학부모, 교원 등

5G장비 등 기술 자립화를 위한 ICT기기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 「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산업의 최신기술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이 11월 20일(수)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ICT 기기산업이 이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글로벌 ICT 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인공지능·5G 등과 융합된 컴퓨팅 장비 및 네트워크, 3D프린팅 등 각 분야의 성과물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번 행사는 ▲전시회, ▲시연/체험존,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채용설명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었고, 국내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일반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분야별 기술동향, 우수장비 도입 사례, 미래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였다.
- 행사에 앞서, 기조강연에서는 “글로벌 ICT 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ICT R&D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산장비·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방안을 모색하였고 R&D 기술·제품이 실제 수요처에 연계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 본 행사인 개최식에서는 우수장비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등 ICT 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이 있었다.

- 전시회에서는 네트워크, 컴퓨팅·데이터센터 솔루션, 3D 프린팅, 우수성과 제품 등 관련 4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융합서비스 장비,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인공지능 등을 위한 GPU 서버, 체험자가 직접 모델링한 후 출력할 수 있는 3D프린팅 등 다양한 제품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컨퍼런스에서는 3D프린팅 글로벌 산업동향,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기술, 초연결·지능화에 대응한 5G 융합서비스 등 분야별 최신키술 동향을 공유하고, 시장전망을 제시하였다.
 - 특히, 올해는 ICT 기기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상담회, 구인·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채용설명 상담회를 함께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제품판로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5G를 본격 상용화하면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분야로 ICT 기기산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고 선제적 기술 확보가 필요한 5G 장비·부품·서비스 분야 등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5G, AI 등 미래 신서비스 실현 및 ICT기기 산업 성장촉진 등을 위해 산·학·연·관 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의 성과체험·교류의 場을 마련

□ 개 요

- (주 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ICT기기산업이 이끈다!
- (일시/장소) '19.11.20(수) 10:00~17:00/ 코엑스 1층(그랜드볼룸 101호~105호)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
 - * 한국컴퓨팅산업협회(총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기가코리아사업단, 3D융합산업협회
- (프로그램) △개회식 △전시/체험 △컨퍼런스 △비즈니스상담/채용설명·상담회 등
- (참석대상) 국산장비 산·학·연·관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000여명

□ 주요 내용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유공자 포상)	10:45~11:00(15') 11:00~11:15(15') 11:15~11:40(25') 11:40~12:00(20')	○ 주요내빈 인사 및 환담 ○ 개회사(KCIA), 축사1(과기정통부), 축사2(IITP) ○ 유공자 장관표창(11점) 및 유관기관장상 포상 ○ 테이프 커팅식, 전시장 투어	(기 조강연) · 글로벌 ICT 기기산업 전망 · 소재·부품장비 관련 ICT R&D 등 [103호] (축사)정보통신정책실장
오찬	12:00~13:00(60')	점심식사 및 교류의 시간	
전시회	10:00~17:00	○ 분야별 우수제품, 우수구축사례, ICT융합인증제품 등	전시홀, 104/105호
컨퍼런스	13:00~17:00	○ 3D 프린팅 컨퍼런스 2019	101호
		○ 스마트 컴퓨팅 & 스마트 데이터센터 컨퍼런스 2019	102호
		○ 네트워크 / 기가 코리아 컨퍼런스 2019	103호
시연/체험존	10:00~17:00	○ 컴퓨팅, 3D프린팅, 기가코리아 우수제품/서비스	전시홀
비즈니스상담	13:00~17:00	○ 각 분야 전시 기업별 1:1비즈니스 상담(신설)	전시부스/105호
채용설명 상담회	13:00~17:00	○ 참가기업별 채용설명회 및 채용 상담(신설)	104호

「2019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행사 세부내용

구분	시간	행사명 (장소)	주요 내용	비고
기조강연	10:00~11:00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강(안) - 주제 1 : 글로벌 ICT 기기산업 경쟁력강화방안 - 주제 2 : 소재·부품장비관련 ICT R&D추진방향 	인텔코리아 IITP
개회식 (유공자 포상)	11:00~11:40	산업인의 날 (1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개최사 : KCIA, 축사1 : 과기정통부, 축사2 : IITP - 유공자 장관표창(11점), 유관기관장상(IITP 3점, NIPA 3점), 감사패(KCIA 1점, KANI 2점) 	정보통신정책실장 (축사, 시상)
	11:4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투어 	
오찬	12:00~13:00	-	점심식사 및 교류의 시간	
전시회	10:00~17:00	네트워크	○ 네트워크 가상화 및 지능형 솔루션, 광전송장비, 클라우드 구축 대응 장비 등	44개 부스 (장비/솔루션)
		컴퓨팅· 데이터센터	○ 서버, HPC,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고효율DC 등	
		3D프린팅	○ 공공부분 성과물 및 생활 밀착형 창작물 및 제품 등	
		우수성과	○ 유공자 우수사례, ICT융합인증제품, '20년 신제품 등	
컨퍼 런스	13:00~17:00	3D 프린팅 (101호)	○ 3D프린팅 동향 및 성장전략, 3D프린팅 활용 성공사례(산업·생활분야) 총 2개 세션 구성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프린팅 장비·소재·SW, 활용사례
		컴퓨팅& 데이터센터 (102호)	○ 컴퓨팅 및 스마트 데이터센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최근 기술 및 시장동향, 구축사례 등 제시 ·(운영)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엣지컴퓨팅, 메모리컴퓨팅,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 등
		네트워크 /기가 코리아 (103호)	○ 통신3사의 네트워크 구축·서비스 추진 방향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중소기업 협력개발 및 실증 지원 사례 등 논의 ·(운영)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기가코리아사업단	초연결 네트워크, 5G 기술동향
시연/ 체험	10:00~17:00	전시홀	○ 컴퓨팅, 네트워크, 3D프린팅, 기가코리아 등 각 분야별 우수제품/서비스의 시연 및 체험존 운영	8개 우수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상담회	13:00~17:00	전시홀 105호	○ 각 분야 전시 기업별 1:1비즈니스 상담	'19년 신설
채용설명 상담회	13:00~17:00	104호	○ 참가기업별 채용계획 설명 및 상담	'19년 신설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쏠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석사	박사		
현 행	7,500	1,500	1,000	4,000	1,000
조 정	6,200	1,200	1,000	3,200	800
감축규모	1,300	300	-	800	200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 (한·일 월드컵, WBC)

-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조 정	결 과
국제 예술 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 (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 (2개)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31개 대회 (2개 대회 기준 강화)
	국내개최	6개 대회		5개 대회
국내(전통) 예술대회		7개 대회	연극, 미술대회 제외 (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1개)	5개 대회 (1개 대회 부문 축소)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 (악기별 10개 ⇨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

-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

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 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 '19년 배정인원 : 공중보건 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 배정인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 다만,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 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 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 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끝//

농식품부, 농업인들과 농업환경보전 위해 팔 걷어 붙인다.

-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제공 공간으로 보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 미래 농업·농촌 역할('18, 국민의식조사, 중복응답) : 식품안전성 향상 53.1%, 안정적 식량 공급 50.3, 환경보전 및 여가공간 활용 43.8, 지역활성화 31.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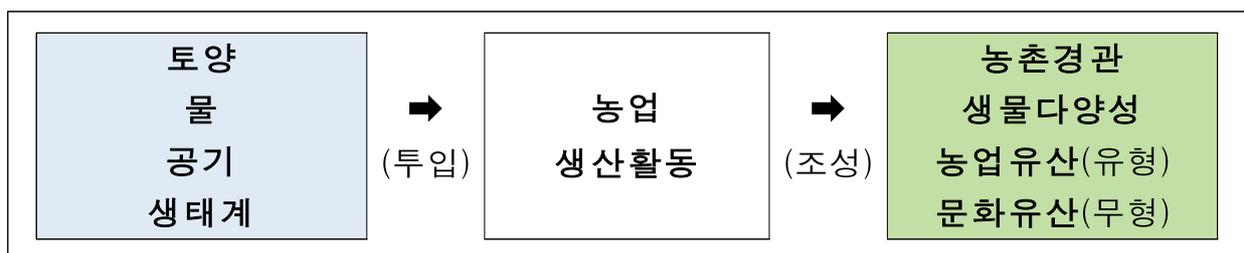
○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도입하였다.

*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치('15)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배(1위), 8.6배(2위)

- (질소·인)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농업 환경의 범위 》

◆ 1)농업생산에 활용되는 환경요소와 2)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유무형의 요소 포괄



□ 이번 사업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가 선정되었다.

* (세종) 세종1, (강원) 원주1, 홍천1, (충북) 청주1, 옥천1, 괴산2, (전북) 무주2, 순창1, (전남) 순천1, 담양1, 강진1, 장성1, (경북) 의성2, 청도1, (경남) 고성1, 거창1, 의령1

《 선정 결과 : 20개 마을(6개 시·도, 17개 시·군) 》



【지자체별 선정현황】

시·도	시·군
세종 (1)	◆세종(1)
강원 (2)	◆원주(1), ◆홍천(1)
충북 (4)	◆청주(1), ◆옥천(1), ◆괴산(2)
전북 (3)	◆무주(2), ◆순창(1)
전남 (4)	◆순천(1), ◆담양(1), ◆강진(1), ◆장성(1)
경북 (3)	◆의성(2), ◆청도(1)
경남 (3)	◆고성(1), ◆거창(1), ◆의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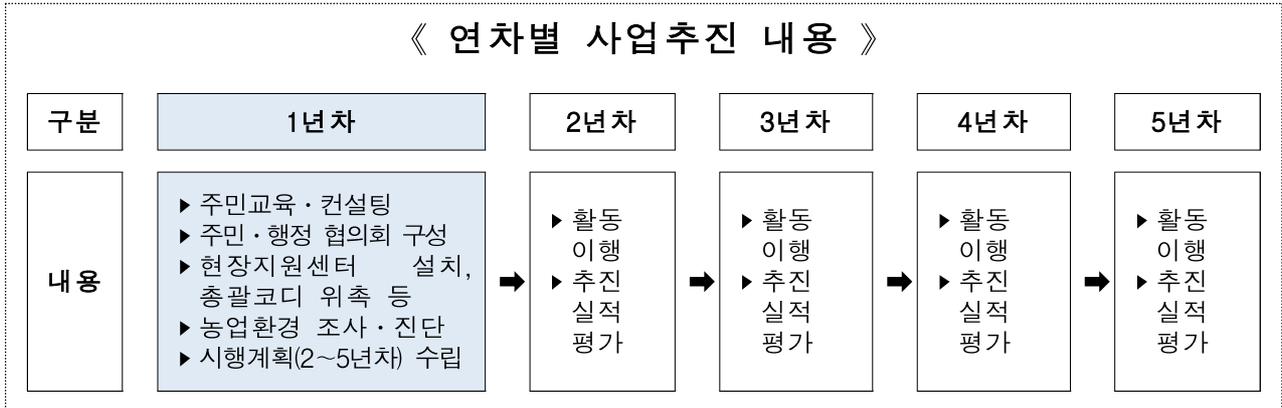
□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향후 5년간 650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사업 1년차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며,

* 주민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사업총괄코디 위촉 등

○ 사업 2~5년차의 경우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 활동* 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예시) 비료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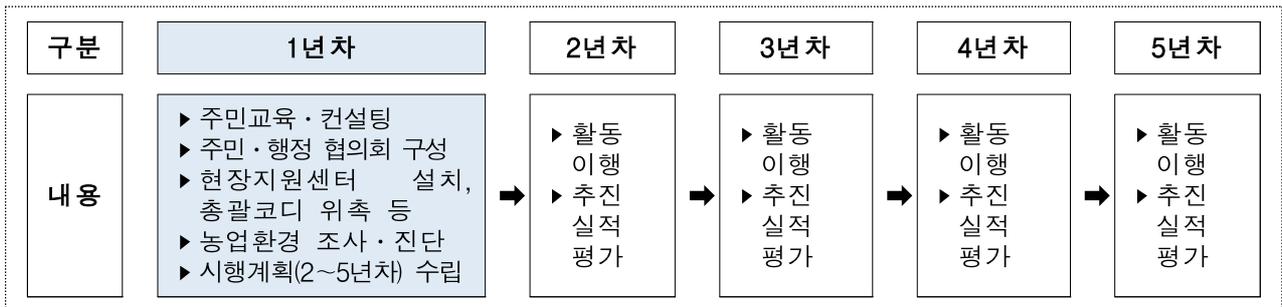
○ 이에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본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시행 방식·절차, 농업환경 보전활동별 매뉴얼 및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시·도	시·군	위치	마을명
세종(1)	-	부강면 금호리 일원	서원말마을
강원(2)	원주	흥업면 매지리 일원	매지3리마을
	홍천	서석면 풍암리 일원	고양산아람마을
충북(4)	청주	청원구 내수면 세교리 일원	세교1리마을
	옥천	이원면 개심리 일원	장화마을
	괴산	감물면 오성리 일원	신기마을
	괴산	청안면 부흥리 일원	제비마을
전북(3)	무주	무주읍 용포리 일원	잠두마을
	무주	설천면 기곡리 일원	기곡마을
	순창	순창읍 신남리 일원	대정마을 등
전남(4)	순천	주암면 궁각리 일원	궁각마을 등
	담양	가사문학면 가암리 일원	청촌마을
	장성	삼계면 생촌리 일원	생촌마을 등
	강진	군동면 금강리 일원	안풍마을
경북(3)	의성	점곡면 윤암리 일원	윤암마을
	의성	단밀면 위중리 일원	위중마을
	청도	운문면 마일리 일원	마일마을 등
경남(3)	고성	대가면 유흥리 일원	삼계마을
	거창	남상면 임불리 일원	임불마을
	의령	대의면 행정리 일원	행정마을 등

붙임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개요)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 시행
 -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기반 조성
 - * 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 사업시행/사업대상 : 시장·군수/농업인·주민
 - * (사업대상지)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 마을, (규모) 20인 이상의 농업인, 주민 등
 - 예산/사업지 : ('19) 750백만원/5개소 → ('20안) 875/25(누적)
 - * 재원 : 농특회계(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사업 內 내역사업)
 - 지원기준 : (사업대상) 농촌지역 마을, (지원비율) 국비50/지방비50, (총사업비/지원기간) 650백만원/5년*, (자금용도) 농업환경보전 활동비 등
 - 연차별 추진내용 : (1년차) 주민 교육·컨설팅, 환경진단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2~5년차) 개인 및 공동활동 이행 및 평가 등



- 농업환경보전 활동 : 토양·용수·경관·생활·유산·생태 등 농업환경 분야별로 다양한 개인 및 공동 활동과제 시행

분야	단위과제
토양	▪ 적정 양분투입, 외부 양분투입 감축, 농약사용 절감, 토양침식 방지 등
용수	▪ 농업용수 수질 개선,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 등
대기	▪ 온실가스 감축, 축산 악취 저감 등
경관/생활	▪ 농촌경관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
유산/생태	▪ 농업유산 보전, 농업생태계 보호 등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

-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의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입니다.
-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신창현의원 발의안('19.8.23), 강병원의원 발의안('19.9.10)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습니다.

* 11.21~2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11.15 旣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3~6일 예정)

** '20년 수요조사 결과('19.8~9), 17개 시·도에서 1,020여명 신청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

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권역별 첨단장비 투입 계획 >

권역	첨단장비	
	11.26일 현재 운영	추가투입(~12.25)
수도권	드론·이동식측정차량 2set	드론·이동식측정차량 2set
강원권	-	드론·이동식측정차량 2set
호남권	-	드론·이동식측정차량 4set
충청권	-	드론·이동식측정차량 2set
영남권	드론·이동식측정차량 1set	드론·이동식측정차량 3set
기타 (지역검토중)	-	드론·이동식측정차량 1set, 무인비행선 2대, 분광학 장비 1set



-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 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 개요(안) : 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 체결 >

- ① (대상)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
- ② (협약내용) △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 TMS 정보 시범공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계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 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11.20, 대전) 축산분야, (12.3, 대전) 농기계, (12.5, 대전) 농촌지역 소각, (12.2, 세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 그리고,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건강 보호 >

□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 목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일)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천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고농도 시기 4개월('19.12~'20.3)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45,817)로, '1

7.1~12월 간 이루어진 연간 점검률 5.7%(2,443/42,487) 대비 대폭 향상

-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_{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_{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합니다.
 - * (낮음) PM_{2.5} 농도 35 μ g/m³ 이하, (높음) PM_{2.5} 농도 35 μ g/m³ 초과
-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 19개 권역 : 15개 시·도 + 경기 남부/북부 + 강원 영서/영동
 - ** 6개 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

-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합니다.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상황실장 : 환경부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합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시작되는 공간!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 강원권 최초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 전문기관 원주에 문열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11월 25일 오후 2시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정정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획관리이사, 서병재 강원도 부교육감, 장애인단체장, 학부모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서비스를 통해 직업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 강원대학교, (주)삼양THS, 롯데마트 등 10개 파트너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문서작성, 선별, 물품정리 등 사무행정, 제조기술, 외식서비스 등 총 10개 직무를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꾸민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게 된다.
- * 강원대학교(문서작성·사무보조), 강원대학교병원(린넨·요양보조), 강원도교육청(도서분류·진열), BGF푸드(외식서비스), 스파오(의류매장 서비스), 롯데마트(대형마트 서비스), (주)삼양THS(제조라인 선별), (주)성안(세탁물 분류·접기), 카페의 숲(고객응대서비스), 면접의신(모의면접 VR체험)
-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충북 등 총 8개소이며, 강원권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9번째로 문을 열게 된다.

- 앞으로 기업의 현장 중심 직무를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체험·교육훈련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소식에 참석한 공단 정정식 기획관리이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것이다” 고 강조하면서,
- “장애인이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붙 임 : 1.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요 1부. 끝.

□ **설립경과**

- 2019. 1.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지역 선정
- 2019. 5. 강원도교육청과 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 2019. 7~11.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구축 공사
- 2019. 10.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개시
- 2019. 11.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 **운영개요**

-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1, 채움플러스 무실1차 빌딩 2층
- 규 모 : 2층 전체(전용면적 1,180M²)
- 훈련 규모 : 연간 400명
 - 고용연계훈련(80명) : 제조기술, 서비스지원, 사무행정보조 직종
 - 특별과정(320명) : 직업체험관.체험내용 및 협력업체 현황

체험직무	체험내용	협력업체
외식보조	식재료 손질, 식기세척기 사용, 세척집기 정리 등	
의류매장서비스	의류진열, 도난방지태그 부착, 스팀다림질 등	
사무보조	사무행정 보조, 서류정리, 우편물 분류 등	
사서보조	도서분류·진열 및 검수, 도서위치 안내 등	
마트 상품정리 및 매장보조	상품진열, 재고정리, 계산대체험, 카트정리 등	
제조기술보조	제조 생산라인 선별작업 및 완제품 분류 등	
세탁보조	세탁 및 세척, 세탁물 분류, 이동, 접기 등	
린넨·요양보조	침대정리, 식사 돕기, 휠체어 이동보조 등	
바리스타보조	청결 및 위생관리, 고객응대, 커피제조 등	
모의면접	VR을 활용한 면접 콘텐츠 제공	

청소년정책 결정과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지자체·기관 공모 진행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정책 전반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2018.12.18. 개정, 2019.6.19.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

-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 위원 구성(총 30명 이내)
 - 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 위 원 : 당연직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당 연 직)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13개 기관 차관(급)
 - (민간위원) ①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은 총 6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후보자 모집은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공개모집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각 2명)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고, **유관기관****도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각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모집기간·절차 등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밖청소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청소년)

-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 1996.1.1 ~ 2007.12.31. 출생한 자(※ 2020년 기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비롯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월 최종 청소년위원을 확정할 계획**으로,
 -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윤희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 **위원회 현황**

- (구 성)

구분	부 처 명	직 위	부 처 명	직 위
정부 위원 (당연직)	여성가족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청장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민간 위원	김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이은경	명지대학교 교수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	황윤옥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장

- (임 기) 임명일로부터 2년

- (기 능)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 혁신도시 성장 발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역할 수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12일 혁신도시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강원도에 설립 허가를 하였다.
- 지원센터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증2」의 주요정책인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 및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 이번에 설립을 허가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최초 3년간은 공무원 파견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 사무실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21.6월 준공) 건물 3층에 입주하여 센터 내 기업의 분양, 유치 등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건물 준공 전까지는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반곡동

1913-7) 가든식스에 임시 입주)

□ 참고로, 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 명칭을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회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강원도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나머지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히며,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업개요

- 위 치 :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 규 모 :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 입주(2023년)
* 부지 4,844㎡ 연면적 13,804㎡, 지하1/지상10
- 사업기간·총사업비 : '18.1월 ~ '21.6월(3년)/ 297억 원(국비 160, 도비 137)
- 설립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강원도 출연기관)
- 주요기능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를 위한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운영주체
- 운영방법 : ('19~'23년) 도 출연금 지원, ('24년 이후) 자립화

□ 조직도(안)



□ 조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6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를 주제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해양레저관광 국회정책토론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왔다. 윤준호 의원이 주최하는 올해 토론회에는 김해영 의원, 최인호 의원과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학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며,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활성화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로 2012년부터 개최

□ 행사 개요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 (일시/장소) ‘19.11.26(화)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19.12월중 부산MBC, 국회TV 녹화방송 예정(60분)
- (주최/주관) 국회의원 윤준호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후 원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주요참석자 : 윤준호 의원, 김해영 의원, 최인호 의원,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약 100명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 제1부 : (사회) 김해영 의원			
14:00~14:0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5	10분	참석자 소개	
14:15~14:20	5분	비전영상 상영	
14:20~14:30	10분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14:30~14:45	15분	사진촬영 및 휴식시간	
○ 제2부 주제토론 : (좌장)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14:45~15:00	15분	주제발표	경기도 시흥시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15:00~16:00	60분	주제토론 및 자유토론	고동환 이사(지에스브랜즈) 최영재 대표(프린세스요트코리아) 양진서 대표(동남보트) 최경일 부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